

[발표6]

한국내 일본 사도금산 세계유산등재 반대운동 실태
(韓国内における日本佐渡金山世界遺産登録反対運動の実態)

황의원(黃意元, 한국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발표자소개] 한국의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1977년 한국 대구 출생으로, 한국철도대학을 졸업했으며, 한국방송공사(KBS) 시청자위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및 과학중심의학연구원 원장,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학술 및 과학 분야를 다뤘은 언론인으로서, 십수 년 전부터는 특히 한국 언론의 반일 풍토 문제를 비판하고 공론화해 왔다. 한국내 대표적인 반일단체인 정대협과의 소송에서도 승소한 경력이 있다. 출판인으로서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의 진실을 밝히는 책을 한국에서 번역 출판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머리말

2022년 2월 1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은 사도금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고, 청와대는 2월 3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영역에서도 등재 반대를 도모하는 관련 세미나가 개최되는가 하면, 일부 좌파 단체는 거리로 나가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사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에서도 이른바 역사전쟁(歷史戰)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반일 문제, 그리고 징용공 문제와 관련해 이러한 민관합동 반대운동은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다. 2015년 하시마섬의 유네스코 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당시 한국 정부와 좌파 시민사회는 국내외로 총력전을 벌였었고 심지어 등재가 확정된 이후에도 영화나 예능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프로파간다전을 펼친 바 있다. 하시마섬 등재 확정이 이뤄지고도 한국 정부와 좌파 시민사회는 이 징용공 문제에 대한 집착을 멈추지 않았다.

이번 사도금산 등재 문제와 관련해서도 역시 한국 정부와 좌파 시민사회는 한층 더 치밀하고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이 봤을 때 최근 한국에서 상대적 친일로 보이는 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긴 했으나, 이미 의회에서도 소수파라는 취약성을 갖고 있는 새 정권은 얼마든지 ‘반일’에 의존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전개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1 한국 정부와 여당, 지자체

올해 1월 28일(일본 문화청이 사도금산 유네스코 추천을 결정한 날), 한국의 외교부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지하여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외면한 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로부터 엿새 뒤에는, 청와대 핵심관계자(통상 대변인이나 국민소통수석, 또는 비서실장)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관계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월 2일에는 한국에서 의석수 2/3를 차지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과 노동 착취로 우리 선조들의 한이 서린 참혹한 인권 유린의 현장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건 개탄스럽다”며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표명한 1998년 ‘한일 공동 파트너십’의 정신을 부정하고 일제 침략으로 피해입은 우리 국민을 능멸하는 만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등재 추진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2월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도금산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의 본질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역사 앞에 진정성 있는 자세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역시 사실상 등재 추진 철회 요구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중앙 정치권의 움직임은 이렇하고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여권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지방 의회에서도 줄줄이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먼저 광주시의회가 2월 11일 선발주자로 사도광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목포시의회, 세종시의회, 창원시의회, 서울 강북구의회, 전주시의회가 차례로 동일한 내용의 결의문을 내놓았다.

현재 일본에서는 대선 기간 중에 한일관계 개선 의사를 밝힌 윤석열 당선자에게 나름 희망을 품고서, 5월에 그가 청와대에 입성하면 등재 반대운동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희망적 관측(wishful thinking)’에 불과하며, 긴장감을 늦추거나 방심하는 순간 한국발의 견제를 수 없는 반격의 파도에 휩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애시당초 윤석열 당선자는 정치 입문 이전까지 단 한번도 한일 양국 현안인 역사문제에 입장을 밝혔던 바가 없는 인물이다. 그는 이 문제로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인사가 아니다. 그는 선거기간 중에는 오히려 옛 위안부로 알려진 이용수와 단독 면담을 갖고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반일 포퓰리즘 정치를 예고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심지어 역대 가장 반일적이라고 평가받는 정치인인 이재명 후보도 보이지 않았던 행보다. 이런 행태가 향후 윤석열 정권이 지

지율이 떨어지는 등 위기가 있을 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윤 당선인의 핵심 외교 브레인은 김성한 전 외교부 제2차관이다. 그도 역시 “강제 징용 현장이었던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도 우려된다”는 입장을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

2 언론 보도

일본 문화심의회가 사도금산 추천 결정이 공개된 1월 28일, 한국 대표 언론사인 KBS, SBS,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 여타 매체들이 이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다. 추천이 발표된 당일에만 40개가 넘는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고,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좌파 매체인 한겨레가 사설을 통해 일련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또다시 강제동원의 역사 현장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하는 건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한-일 관계가 가뜩이나 악화된 상황에서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싸고 ‘제2의 군함도 사태’가 벌어진다면 양국 관계 개선은 더욱더 멀어질 것”이라며 한 치 양보가 없는 의견을 내놨다.

이를 뒤따르듯 동아일보(22.01.18), 조선일보(22.02.02), 경향신문(22.02.12), 부산일보(22.03.05), 한국일보(22.03.09) 등 주요 신문들 모두가 “일본은 사도광산의 어두운 측면을 내포한 ‘모든 역사(full history)’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를 책망하는데 초점을 둔 칼럼을 게재했다.

방송 보도도 연이어 나왔다. 특히 한국의 국영방송인 KBS는 1월 27일과 28일 이틀 간에 걸쳐 사도광산 단독 보도를 편성했다. 일본 현지의 지종익 특파원은 사도광산의 갱내를 취재한 뒤 관할 주임보와 니가타현 세계유산등록추진실장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방송에서 “한국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앵커의 질문에, 지종익 특파원은 “사도광산에 강제동원 피해자가 조선인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군함도와는 달리 연구나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다보니,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저희 취재진이 현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조선인 명부나 증언자 등을 확보해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 같다”라 답했다.

한편, 한국의 대표 통신사인 연합뉴스는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가 ‘니가타일보’에 게재한 사도금산 관련 의견광고를 “우익단체의 선동”이라고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이 기사는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하면서 해당 의견광고를 맹비난하는 내용이다.

한국 언론들의 사도금산과 관련한 보도들은 한국 역사학계의 ‘강제노동’설을 고스란히 대변하면서, 1차 사료나 현지 주민의 증언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입맛에 맞는 학자와 지식인을 선택해 인터뷰하거나, 선별된 자료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극도로 왜곡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체계적인 선별 및 편향 보도만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통에 한국인들이 일본의 관련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일본 측에서도 한국을 대상으로, 일단 일본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전달하는, 작더라도 단단한 홍보 채널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3 학계, 연구계

한국 학계와 연구계의 동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1월 27일, '사도광산 강제동원 역사 왜곡'을 주제로 유네스코 등재 추천 결정 이전에 이미 세미나를 개최했던 바 있다. 당일, 한국에서는 이 문제로 학계에서 가장 강한 발언권을 갖고 있는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과 강동진 경성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들을 포함한 네 명의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했다.

정혜경 대표연구위원은 저서 '탐욕의 땅, 미쓰비시 사도광산과 조선인 강제동원'(2021)에서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노동자는 1,200명에 달했으며, 진폐 휴유증으로 사망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현재 한국내 베스트셀러로 등극되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도 2월 16일에 열린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강행에 따른 대응과 전망' 학술세미나를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행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올 1월(미쓰비시 사도광산)과 3월(세계유산의 등재 조건과 일본의 행태) 두 번에 걸쳐 각각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 외에 서경덕, 호사카 유지와 같은, 사실상 활동가의 성격을 띠는 '반일 학자'의 행보도 눈여겨 봐야 한다. 지난 3월 1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반대를 호소하는 서명운동을 개시했고, 이는 현재 각종 SNS와 언론을 통해 널리 전파되고 있다. 그는 향후 세계적인 유력 매체에 관련 광고를 게재하고 다국어 영상 등을 제작 및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연일 각종 종편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강한 어조로 일본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올해 초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정기(日政期)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사도광산의 조선인 노동자는 "징용"이 아닌 "강제노동"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내년 7월까지 극우와의 역사전쟁이 시작됐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4 민간단체

끝으로 한국의 민간 영역에서의 관련 활동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사이버외교사절단을 표방하는 국수주의 단체인 반크(VANK)는 지난달 말부터 사도광산 등재 반대 캠페인을 발족해 다방면에서 등재 저지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반크는 '글로벌 홍보 5대 프로젝트'에 착수해, 앞으로 국내 초중고교에서 특별 수업 추진, 영어 홍보사이트

구축, 홀로코스트센터에서의 사도금산 역사왜곡 홍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좌파 단체인 전국민중행동, 그리고 평소 위안부에 대한 선전선동을 이어온 정의기억연대(구 정대협)도 역시 3.1절을 맞아 일본 정부의 등재 결정을 규탄하고 사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편, 제주도 소재의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는 지난달 18일에 '왕벚 프로젝트 2050'를 공식 출범시켜 이번 등재 문제와 관련해 일종의 항의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사업은 2050년까지 국내에 시재된 일본산 벚나무(소메이요시노 나무)를 모두 벌채하여 토종의 '왕벚'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차기 유네스코 심사표결이 실행될 때까지 이와 같은 시민단체들의 광범위한 반일 운동이 예상된다.

맺는말

이번 한일 역사전쟁은 2015년 7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후반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시마섬 유네스코 등재 상황을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하시마섬과 관련 유네스코 표결이 진행되기 한 달 전, 윤병세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상과의 회담에서, 한국 정부도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서로 협력하자고 합의했던 바 있다. 일본은 약속을 지켰고, 그래서 한국 측 유산은 만장일치로 무사 가결됐다. 그러나 일본의 차례가 다가오자 돌연 한국은 유산의 묘사(描写)에 '강제노동(forced labor)'이라는 표현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일본 외무성은 다소 누그러진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라는 언어로, 한편으론 치명적인 타협에 동의하고 말았다. 이는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일본의 이른바 '고시누케(腰抜け)' 대처가 초래한 에피소드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일본은 자신들의 진실 앞에서 일단 당당해야 한다. 진실은 일단 제쳐두고,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진실'이 아닌 '우호'를 최선으로 두는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절대 좋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은 하시마섬 등재는 어떻든 성공했었다고, 또 한국에 상대적 친일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긴장을 풀어선 안 된다. 일본인이 이해하기 쉬운 역사적 사례를 든다면, 1615년 어느 봄날, 오사카 전투를 마치고 한시름 놓고 있던 이이 나오타카(井伊直孝)에게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승리하였을 때야말로 투구의 끈을 죄야 한다”고 조언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일본이 진실 앞에서 한발 물러서거나, 또는 우호라는 대의에 굴복하는 태도를 취하는 순간, '한국', 정확히는 '한국의 거짓말 세력'이 가차 없이 '반격의 날(刀)'로 '한국과 일본의 진실 세력'의 사기를 꺾어 버릴 것이다.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의 거짓말 세력은 이미 일본 측의 역사전쟁의 선전포고를 수락했다. 이제는 한국과 일본의 진실 세력이 더욱 단호한 입지를 다지고 저 공

격에 맞설 차례라고 생각한다.